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패소...경제계 촉각

대법 "경영사정 개선 지급여력 있어...5명에 미지급금 줘야" 노조원 3000여명 달해...추가소송 땀 수백억대 지출 불가피

금호타이어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금호타이어 노조원이 3000여명에 이르는 만큼 향후 막대한 추가비용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계 안팎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의信義)과 신의(信義)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향후 경제계의 노사 합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임금 분쟁에서의 '신의성실 원칙'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다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 존속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그동안 기업 등 사용자측은 통상임금 소송 과정에서 노조측의 통상임금 지급 요구를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안겨줘 경제·사회적 원인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등을 펼쳐왔다.

24일 법조계와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최근 금호타이어 노동자 A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패소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회사측이 상여금을 빼고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수당 등을 지급한 점을 들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 5개월 간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워크아웃 기간이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노동자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상여금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정기성·일률

성·고정성이 인정되는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에 상응하는 부분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그러나 회사측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 등의 추가임금 청구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 이익을 추구하고

회사측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판단, 정의와 형평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반하고 용인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다. 기업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경제·사회적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노동자의 추가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대법원은 이같은 점을 들어 "상여금이 통상 임금

에 포함될 경우 회사측이 지급해야할 임금 총액도 증가,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조원을 초과하는 연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총계, 자본총계 규모 등을 보면 회사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조측은 즉각 환영했다. 전체 조합원 수를 고려하면 승소 금액을 48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노조측은 또 법적 자문을 받아 2015년~2020년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코로나 청정 조선타' 만듭시다 2021학년도 1학기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조선대학교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캠퍼스에서 '코로나19 청정조선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오는 4월 2일까지 교내 주요 건물 및 공간에서 진행되며 버스정류장, 엘리베이터, 쉼터 등 캠퍼스 내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방역수칙 준수를 환기시킨다. <조선대 제공>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 복구민 '팔 걷는다'

관람의 날 운영·환경정비 등 지원

광주시 복구가 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지원한다. 24일 복구에 따르면 비엔날레 기간인 오는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제13회 광주비엔날레 복구 주민 참여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세계적인 문화행사인 비엔날레가 복구에서 열리고 '코로나19'로 전시 일정도 축소된 만큼 주민 홍보 및 참여를 활성화해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구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등과 함께 자체사업, 연계사업, 지원사업 등 3대 분야 16개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체사업으로 비엔날레 전시관 일대 볼꽃을 전시하고 (사)아시아문화예술협회 등 단체가 참여하는 문화예술 공연 및 음악회를 개최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구 28개 동 자생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맞춘 관람의 날 운영과 비엔날레전시관 주변 환경정비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한다. 연계사업으로 복구정경관리와 금붕어미술관 2곳에서 지역 작가들의 특별 기획전도 준비한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공휴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비엔날레전시관 외벽에 미디어파사드 공연을 운영, 야간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불법 광고물·노점상 정비, 행사장 주변 교통·청소대책 추진, 공중화장실 관리·방역, 음식·숙박업소 친절서비스 교육 등 7개 지원사업으로 쾌적하고 친절한 비엔날레 관람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독립유공자·후손 살던 광복촌 아십니까?

정부, 1970년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조성...내일 '공적비' 제막

광주 남구가 1970년대 정부에서 무주택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위해 주월동에 조성한 광복촌 마을에 광복마을 유래비 및 독립운동 공적비를 설치한다.

남구는 24일 "주월동 광복마을의 유래와 그곳에 거주했던 독립 운동가의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26일 주월동 푸른길 광복촌 광장에서 '광복마을 유래비 및 독립운동 공적비 제막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적비 설치의 지난해 주월1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의 제안사업에 따른 것으로, 그간 남구는 광복마을 및 독립 유공자에 대한 사료 조사와 연구 용역을 거쳐 이곳 마을에 광복마을 유래비 및 독립운동 공적비를 설치하게 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광복촌은 1976년도부터 금당산 기슭의 선명학교와 옛 경전선 철도가 놓인 푸른길 공원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국가에서는 광복촌 조성을 위해 넓은 땅이 필요했고, 상이용사촌이 있던 동구 소재동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광복회 회원들의 반대로 대부분 논과 밭이었던 주월동을 선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관계자는 "역사에 길이 남을 독립 유공자 분들의 용기와 업적을 기역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독립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전공대 특별법 통과 환영 전남과학고 이전 추진할 것"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24일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 통과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나주시 금천면에 있는 전남과학고를 한전공대와 인접한 부영CC 내로 이전해 한전공대와 연구시설 및 인적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한전공대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유수의 공과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며 "도교육청도 미래 역량을 갖춘 에너지 분야 기술인재 양성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 모두의 숙원인 한전공대가 내년에 정상적으로 개교해 전남과 나주를 차세대 에너지 연구·개발 및 인재 양성의 메카로 발돋움시키고 아이들에게 새 희망을 안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영재학교 입학 '수도권 쏠림'

광주과학고 입학생 36%

서울·경기 중학교 출신

광주과학고등학교 입학생 10명 중 3명 이상이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분석한 2021학년도 전국 영재학교 입학생 중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 비율에 따르면 광주과학고는 35.7%였다.

대전과학고(74.7%), 한국과학영재학교(부산) (69.4%),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62.5%), 대구과학고(38.9%)보다는 서울·경기 출신 중학생 비율이 낮았다.

강 의원은 "현행 입시 전형은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입학이 좌우된다"며 "이러한 영재학교 입학에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의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한다는 영재학교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국단위 지원이나 이중지원 금지가 필요하다"며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선다형·단답형 위주의 지필고사 폐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 개선방안으로는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 운영, 수학과 과학의 고교 필수과정을 교육과정 포함, 영재학교를 시도교육청이 발굴한 영재를 위탁받아 교육하는 체제로의 전환 등 기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2,000** 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